

우리민족의 '근대인쇄' 시기를 따지자면 해방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해방 이전에는 근대식 인쇄가 별로 없었고 그나마 일제가 운영하던 인쇄소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의 인쇄역사 기록을 찾자면 1954년에 창간되어 오늘날까지 발행되고 있는 인쇄신문이 유일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역사를 더듬어 보는 의미에서 195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인쇄역사를 월별로 정리해 시리즈로 보도한다. 이번 호에는 1954년 이후 매년 9월에 보도되었거나 광고에 게재되었던 내용을 소개한다.

● 인쇄교육기관 더 생겨나야

1975년 9월 1일자 인쇄문화시보는 기획연재시리즈였던 '인쇄기술 교육제도, 이것이 문제점이다'에서 다섯 번째 순서로 국내의 열악한 인쇄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학과의 신설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시보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인쇄술이 가장 먼저 발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인쇄기술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인쇄기술자를 양성하는 교육시설의 미비가 중요한 요인의 하나라고 언급했다.

시보가 비교한 한·일 양국간의 인쇄교육기관의 현황은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당시 국내에는 서울공고에 인쇄과가 있고 대한인쇄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실시하는 인쇄기술통신강좌가 있으며 1976년 3월에도 노동청이 직업훈련소를 개소할 예정이었으나 양이나 질적 수요를 충족 시키기에는 부족했다.

이에 반해 일본의 경우 인쇄기술교육에 관련된 기관은 몇 년전의 통계에 의하더라도 대학교 17개, 초급대학 221개, 고등학교 24개, 인쇄기술양성소 및 직업훈련원 58개 등 상당한 수에 달했다. 우리나라 인쇄교육 기관이 너무나 빈약함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시보는 유능한 기술자를 양성하지 않은 채 기술개발, 제품의 질적향상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연료없이 자동차를 움직이겠다는 생각과 같다"고 비유하며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기계문명이 꽃을 피우게 된다고 해도 결국적으로 기계는 사람에 의하여 다루이지 마련이며, 기술자를 확보하지 않은 채 시설도입이나 기계개발을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시보는 "최소한 대학과정에 인쇄를 포함시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대학에서도 계속해서 인쇄를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함은 물론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해서 각 분야의 인쇄기술자를 양성해야한다"고 지적했다.

● 기술인력난과 양성대책, 업계가 함께 고민해야

인쇄업계가 겪고 있는 인력부족의 현상은 업계스스로가 인력양성에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991년 9월 27일자 인쇄신문은 사실을 통해 "그동안 인쇄업계를 강타해 왔던 기술인력의 부족현상이 이제 우려의 차원을 넘어 최근 성수기를 맞아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같은 인력부족현상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문제의 심각성이 여기까지 오게된 것은 무엇보다도 인쇄업계가 그동안 인력양성에 소홀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이 나온 것은 당시 관련단체등의 조사 결과 성수기를 맞아 규모가 큰 인쇄사나 적은 인쇄사에 관계없이 업체당 3, 4 명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

사실에서 밝히고 있는 인력부족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력양성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보다 손쉬운 스카우트에 의존해 왔기 때문. 그 결과 업계는 상대적으로 생산성을 앞지르는 인건비부담을 안게 되었으며 이는 곧바로 경쟁력을 약화시켜 성장의 한계성에 직면하는 등 위기감을 맞게 되었다는 것이다. 인쇄신문은 특히 인쇄업계의 기술인력 부족은 오프셋 인쇄기외에 제판, 제본 등 전공정에 걸쳐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어 수주산업인 업계의 구조적인 특성을 감안한다면 획기적인 대책과 비전이 없는 한 생산활동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인쇄신문은 동년 9월 9일에 착공한 서울조합의 인정직업훈련원에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인정직업훈련원에 업계 기술인력의 모든 책임을 떠맡게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지만 인력난을 풀어 나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전문기술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해 내는 자생력을 갖추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인쇄신문은 성숙된 산업활동과 문화향수권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인쇄물의 품질이 고급화·다양화 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기술을 혁신시키고 디자인을 선도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다”며 “고급 인쇄물 생산과 험난한 수출과고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산학협동체제 등 제반 인력여건들을 점검하고 아울러 건실한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대책이 과거 어느때 보다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인쇄기 관세감면 재개되나

재정경제원이 공장자동화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품목을 줄이면서 차단된 인쇄 및 관련기기의 관세감면 혜택이 다시 이뤄질 것이라는 기사가 보도됐다.

1995년 9월 8일자 인쇄신문은 정부가 인쇄업계의 어려운 현실과 인쇄기가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지 않는 점, 개방을 앞두고 시설교체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황을 반영해 1996년부터(2월 1일)다시 관세감면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그동안 관세율 8%에서 40%의 감면혜택을 주던것을 폐지, 동년 2월 1일부터 관세율 8% 전액을 관세로 내도록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0억원짜리 인쇄기를 구입했을 경우 8천만원의 관세를 1백% 부담하게 돼 인쇄업자들의 자금부담이 가중됐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의 관계자는 “국내생산이 안되고 시설교체가 많이 이뤄지는 인쇄업계의 경우 통상산업부와 협의, 내년부터 인쇄기 등은 다시 관세감면이 이뤄지도록 관련규정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

인쇄업협회는 동년 6월과 7월에 “성장가능성을 갖고 업계 스스로 시설을 선진화 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이같은 업계의 의욕을 꺾어버리는 관세감면 폐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강력한 항의와 함께 통상산업부에 폐지재고를 요청하는 건의를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인쇄신문은 통상산업부도 대한인쇄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요청

한 관세감면폐지품목(인쇄기, 절단기, 오프셋 교정기, 원색분해기, 인쇄용 자동식판기, 정합기, 무선철기, 삼면재단기, 지동결속장치)모두를 관세감면해 주도록 재정경제원에 요청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 인쇄 전담요원 배치 · 행정 지원체제 강화

1992년 9월 25일자 인쇄신문은 문화부가 인쇄분야 전담원을 배치하는 등 인쇄행정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당시 문화부에 배치된 전담요원은 인쇄출판담당 김원기 행정사무관과 인쇄담당 오균옥 행정주사로 인쇄신문은 이번 조치가 인쇄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쇄기계발전을 위한 노력을 정부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인쇄신문은 이 같은 인사조치가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인쇄단체를 중심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쇄계의 현안문제를 제시하고 지원책을 촉구하는 등의 활동이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동년 5월 7일에는 인협 박충일 회장, 광득용 부회장, 윤병태 부회장이 이수정 문화부장관을 예방하고 업계당면과제 해결을 건의한 바 있다.

당시 인협회장단은 인쇄업을 일반사업분야로 보지말고 문화산업 측면에서 지원해줄 것을 요망했으며 인쇄업계에서 대한인쇄연구소 설립, 경영과학화와 기술개발에 전력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문화부내에 인쇄전담부서가 없기 때문에 정책면에서 소외당하고 있으므로 인쇄와 관련된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업계의 희망사항이라고 강력히 건의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당시 문화부에서는 정부조직확대 억제방침에 따라 우선 도서출판과에 인쇄전담요원을 배치, 인쇄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키로 약속했다.

김치원 기자 kcw@print.or.kr